光日春秋

정 용 덕

대나무·유교·민주주의

1980년대 초 필자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대표적인 문화재를 미국 전역을 돌며 전시한 적이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인 교수 한 분을 초청해 함께 관람을 했다. 전시관을 다 둘러본 후 그 분은 회화나 도자기 등 각종 예술품에 유난히 "대나무" 그림이 많다는 소감과 함께 어떤 연유가 있는지를 필자에게 물었다. 조선시대에 학자와 정치인들은 비록 부러질지언정 굽혀지지 않는 대나무와도 같이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선비정신'을 숭상했기에 그런 것 같다고 임기응변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그 미국인 교수는 뜻밖에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수년 전에 중국의 학자들이 서울의 성균관을 참관하고 제례 방식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산주의 혁명, 특히 문화혁명 시절에 중국인들이 전통적인 것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새로이 전통을 복원하던 시기였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성균관이 세계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원형'에 가까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요즈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집단들 간에 협의와 절충보다는 투쟁과 대치가 비일비재 하는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일화들이다.

정치와 행정에서 이념은 필수적인 것이다. 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사고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없지 않다.

그런 경우는 특정의 이념만을 이념으로 생각하거나, 자신과 다른 시각의 이념을 애써 존중하지 않거나, 그도 아니면 그 자신도 특정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이념이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20세기 이후만 해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이 대두하여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먼저, 공산주의나 파시즘처럼 정치경제에 대한 체제수준의 좌우파적 이념들이 있다. 이 경우는 경기(game)의 판 자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 근거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들 이념 간에는 대화를 통한 절충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한 공동체에서 공존하기란 극히 힘들다. 동서독과 남북한처럼 결국 갈라져서 '딴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제2차 대전 이후 서독에서 양극단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정치활동을 억제하고 국민교육까지 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한 공동체의 울타리 내에 공존하면서 정책 대결을 하는 경우에도 시각 차이의 폭에 따라 제도수준의 이념과 행위수준의 이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 수준의 이념은 경기의 규칙 자체에 대한 시각 차이와 그것을 반영한 변화의 추구와 관련된다. 서구 유럽에서 복지국가, 공기업, 지방분권 등의 수준에 대한 좌우파 정당간의 시각 차이가 예가 될 것이다.

반면에 행위수준의 이념은 기존의 경기규칙의 틀 속에서 상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친절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주력하는 미국 정당들의 시각 차이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복이 심한 역사 발전을 경험해 온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좀 더 폭이 넓은 스펙트럼의 이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기복이 심한 역사 발전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유럽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정당 간에 이념폭이 점차 좁혀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병행하여 다른 생각을 지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이를 절충해 나가는 그래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정치문화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형식적 민주주의에 더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행정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홍 성 국

고속도로 '폭설대란' 막으려면

매년 겨울, 눈 내리는 시기가 되면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가 폭설로 인해 일부 기능이 마비되어 운전자들의 발이 묶이곤 한다. 2004년 3월 예기치 않았던 충청지역 폭설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만 되면 비상이 걸리곤 한다. 월동대책을 세우고 상황별 모의훈련을 수없이 되풀이 한다. 덕분에 2005년 12월 호남고속도로 폭설 사태로 일부 차량이 장시간 고립되기도 했으나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으로 전년과 같은 상황은 재발하지 않았으며, 폭설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의 마비는 도공 직원들의 노력만으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습관이 위기관리의 첫걸음이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폭설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속도로에 나설 때 반드시 체인을 준비해야 한다. 체인이 없는 경우 견인차량이나 구조차량이 올 때까지 추운 고속도로 위에서 기약없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차량을 방치한 채 사람만 돌아가야 할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녹슨 체인을 보수하고, 체인을 끼우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장시간 밀폐된 차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히터의 성능을 점검하고, 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 쾌적한 실내공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와이퍼를 점검하고, 담요도 하나 정도 비치해둬야 한다.

눈길을 주행할 때는 우선 서행과 함께 앞차와 간격을 최대한 벌려서 운행해야 한다. 눈길에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평소보다 대처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페달은 부드럽게,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밟아야 하며, 가급적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스핀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나 주정차는 절대금물이다. 갓길은 비상시 긴급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확보 공간이다. 폭설이 내릴 때 비상통행로인 갓길에 불법 통행차량 또는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제설·구급·구난차량마저 통행로가 없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형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

올 겨울에는 취약지 중 하나인 장성 못재구간 등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1개차로(3차로)가 폐쇄되므로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폭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들끼리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도로관리자의 협조 요청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교통정보팀장〉

기 고

송 광 운

자치구 복지예산 부담률 재검토해야

한해 살림살이를 되돌아 보고, 새해 살림살이를 준비해야하는 주민들처럼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연일 바쁘다. 새해 살림살이를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는 비교적 여유롭게 새해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광주시 인구 140여만명의 3분의 1인 46여만명이 살고 있는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1.4% 밖에 되지 않아 새해 살림살이가 실로 걱정이다.

무엇보다도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출산 노령화 대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예산은 국비가 80%~50%, 시·도비가 10%~25%이지만 시·군·구비가 무려 10%~25%를 분담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할 10%~25%가 북구의 살림살이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다. 북구는 올해 총 예산 2천17억원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으로만 985억원을 사용했다. 올 전체 예산의 48.8%가 사회복지예산이다.

올해는 그랬다지만 2007년도 예산을 2천147억원으로 편성하고 보니,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북구 전체예산의 60%대에 이르고 만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22.7%를 제외한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7.8%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최근 5년 동안 북구의 재정규모는 29% 늘어났지만 사회복지예산은 92.%로 급증해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게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개선이나, 도로 확·포장, 하수도 공사, 공원조성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자연히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은 엄두도 못 낼 정도가 되고 만다.

북구는 중앙부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지역여건을 감안한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답변은 아직도 요원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법률에서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군·구의 분담비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결자해지(結者解之)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등보조금제, 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와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 분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광주시 북구청장〉

공공 도서관 책본 후 아무데나 던져 놓아서야

지난 주말 학교 과제에 필요한 책을 대출받기 위해 시내 도서관에 들렀다. PC로 검색을 해 보니 다행히 책이 아직 대출되지 않아 번호를 적어 서고로 향했다. 그런데 책이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가 5권중 겨우 2권을 찾아낸후 도저히 더 찾기가 불가능해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서 담당 직원이 아예 손에 흰 목장갑을 끼고 책을 찾으러 걸어오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 책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게 정상이지만 책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고 아무데나 뒤죽 박죽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기가 책을 분류표에 의해 관리하는게 아니라 책을 보물찾기 해야하는 판이니 여간 힘든게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찾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일반 교양도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월간지나 기타 다른 정기 간행물들의 경우 마구 놓아두는 시민들이 심하다고 한다. 책들을 제자리가 아닌 곳에 마구 꽂아두면 그것을 찾아내는게 여간 고역이 아닐것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왜 모를까.

▲송희건·광주시 북구 태령동

취업 후 즉시 입사포기 타 지원자에 큰 피해

회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다.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각해서인지 중소기업인데도 10명 남짓 모집에 300명 넘게 지원했고 인터넷으로 접수한 서류를 출력해 사정하는데도 1주일이 넘게 걸렸다.

서류 전형과 적성검사, 그리고 면접을 거쳐 합격자 발표를 한뒤 첫 출근날이 됐다.

신입사원들의 사장님 면담이 있어 내심 신경이 쓰였는데 오전 9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돼있던 합격자중 2명이 9시 20분까지 나오지 않았다.

혹시 출근중 교통 사고라도 당했을까 걱정돼 부랴부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봤더니 사고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

한명은 휴대전화를 안 받아 자택으로 전화해 봤더니 학교 도서관에 갔다는 것이다. 출근을 포기했다는 얘기다. 두 번째 사람은 대뜸 "그 회사 안갈 건데요"라고 말했다. 인사팀 직원이 "그럼 연락이라도 해주는게 예의 아닌가요?"고 했더니 "월급 받은 적도 없는데 일일이 연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고 반문했다고 한다.

입사를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는 해야 차점자라도 합격시킬 것 아닌가. 또 결국 그렇게 쉽게 결정내리는 신중치 못함 때문에 탈락한 사람의 피해는 어쩔것인가.

회사를 선택하고 말고 할 자유는 물론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젊은이를 보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토익점수만 맞으면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유은규·광주시 동구 수기동

사 설

J프로젝트 간척지 '무상 양도' 해법 있다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J프로젝트) 조성사업은 예정부지의 76%에 달하는 간척지 부지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 돼 있다.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2천942만 평의 J프로젝트 예정부지 가운데 2천236만 평 규모의 간척지 이양문제를 놓고 전남도와 농림부가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J프로젝트 간척지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림부의 주장대로라면 간척지 부지확보에만 5천억~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뻔하다.

전남도는 간척지 부지매입에 국비 지원이나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림부는 전례가 없는데다 타지역 간척지 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8월 폐쇄된 미군부대 이전부지 약 16만 평에 시민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부지 매입 비용 3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 93년 개최된 대전 세계박람회 부지 27만3천 평 가운데 일부를 무상으로 귀속 받은 바 있다. 농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밝혀진 셈이다.

J프로젝트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장기발전전략 사업이다. 공원조성이나 박람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간척지 문제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J프로젝트 간척지'와 관련해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면 이양, 임대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 않은가.

간척지 문제는 규정이나 절차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에 얽매여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토균형과 국가 장기발전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환율 920원선 붕괴… 외환정책 점검해야

원-달러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 하락을 거듭하던 환율은 6일 920원선마저 무너지며 달러당 916.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91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97년 10월22일 915.10원 이후 9년 1개월 만이다. 전날 대비 하락폭도 7.90원으로 지난 6월30일 이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상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일부에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환율의 급락세를 막지 못하면 9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장률 저하와 유가 불안, 설비투자 부진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암울한 현실에서 환율마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기업들은 채산성의 악화로 '출혈 수출'을 감수하거나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아차광주공장은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수출차량 1대당 14만3천원의 환차손이 발생해 지난 3·4분기까지 1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지방 중소기업은 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등 사정이 더 심각하다.

기업들은 모처럼 달성한 '수출 3천억 달러'시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수출선 다변화와 경영 및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지만 환율 하락속도가 너무 빨라 당황해 하고 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환율 하락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내수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환율이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외환정책이 잘못되면 수출과 내수를 모두 죽일 수 있다. 국내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행복지수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은 지난 2002년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공식을 발표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관·적응능력(개인적 특성)과 건강·돈·인간관계(생존조건), 야망·기대·자존심(고차원 상태)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공식을 적용한 결과 국민 소득 370달러인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한 국가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도 아제르바이잔과 나이지리아와 같은 극빈국이 차지했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신경제학재단(NEF)이 세계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름조차 생소한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공화국이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102위, 경제 대국인 일본과 미국은 각각 95위와 150위를 기록했다. 행복은 결코 부유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증명하는 사례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2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10명 중 3명만이 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다. 생활에 불만족하다는 사람도 32.3%나 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수치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지역발전이나 소득의 지역간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행복지수는 편차가 적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못사는 사회에서는 가난에 대한 불만도 크지 않다. 미국 하버드 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들이 2만달러를 받을 때 5만달러 받는 것이, 남들이 20만달러 받을 때 10만달러 받는 것보다 더 마음 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상대적 박탈감이 여전하다면 강남에 산다고 더 행복할리 만무하다. 행복은 욕심과 반비례한다. 욕심을 버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나 욕심을 접을수록 행복은 커진다. "웬만큼 포기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탁닛한 스님의 말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